

보도	2024.3.25.(월) 조간	배포	2024.3.22.(금)		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 보험조사팀	책임자	실 장	정제용	(02-3145-8730)
		담당자	팀 장	김미선	(02-3145-8726)

**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 
기획조사 강화 및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**

- ① 최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는 **신의료기술**로 승인된 **비급여 치료 항목**  
②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**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**

## I. 추진 배경

-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일부 비급여 치료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, 치료 병원도 전문병원(정형외과 등)에서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되는 상황
  - 아울러,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여 공급하는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
- ⇒ 일부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범행 수법이 지능화·조직화되고 보험금 편취규모 및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

##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 사례

- ① A의사가 **브로커**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허위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**환자들(747명)**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50억원 편취  
→ 의사 징역 7년, 브로커(3명) 징역 1년 6월 등 선고(※ 금감원 수사의로)
- ② B·C**한의사**가 **브로커** 소개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했음에도 실손보험 대상인 치료제 등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여 **환자들(653명)**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6억원 편취  
→ 한의사(2명) 징역 3년, 브로커 징역 2년 6월 등 선고

## Ⅱ. 기획조사 강화 및 실태파악 추진

### ① 실손보험금 지급 급증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

-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급증하는 **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\*** 등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기 취약 부문에 대한 **기획조사를 확대**해 나갈 계획

\* 보건복지부에서 '신의료기술'로 승인하면 고가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므로 병원에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

#### 보험사기 취약부문(예시)

- ① 최근 '신의료기술'로 승인되어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는 비급여진료
- ② 실손보험금 지급금액 상위 비급여진료
- ③ 보험금(실손+정액) 지급금액 및 증가율이 상위인 특정 질병 치료

### ② 의료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파악 추진

- 보험업계 간담회,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,
-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**의료현장 방문**을 통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,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사항 등의 **실태 파악** 추진

### ③ 병원·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확대

-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('24.2~4월) 실손보험 관련 **병의원** 및 **브로커**에 대한 혐의 제보를 접수 중이며,
-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**신속히 조사**에 **착수**하여 수사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\*

\* 금감원·경찰청·건보공단은 병원·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사건을 공동으로 조사·수사 진행중

#### ※ 최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 현황

①금감원·경찰청·건보공단 업무협약 체결(1.11), ②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(1.17), ③금감원·경찰청·건보공단 병원·브로커 연계 보험사기(3건) 조사·수사 착수(2.8), ④공·민·영 공동조사협의회 개최(3회), ⑤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개정(2.13. 공포) 등 **법정부차원의 보험사기 척결**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중

### Ⅲ. 소비자 유의사항

-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·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\*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

\*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① 병원 상담실장(브로커 포함) 등이 “**실손보험 있으세요?**”라고 물으며 **불필요한 진료·시술** 등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
- ②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성형·미용시술·영양주사 등에 대해 “**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**”라고 제안하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함
- ③ 상담실장 등이 권유하는 말만 믿고 “**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**”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가담할 경우 보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도 결국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

####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(보험계약자) 처벌 사례

- ① 병원 상담직원의 “**원하는 성형수술, 미용시술을 80~90% 할인된 가격에**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드림”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성형수술(코, 쌍꺼풀 등) 등을 받은 25명 적발 → 벌금형(50~350만원) 및 지급 보험금 반환
- ② 병원 상담실장의 “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, **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**”는 제안을 받아들여 미용시술(미백, 안티에이징 시술 등)을 받은 10명 적발 → 벌금형(50~100만원) 및 지급 보험금 반환
- ③ 병원 상담실장의 “도수치료와 함께 **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주겠다**”는 제안을 받아들여 미용시술(OO주사, 제모, 레이저 등)을 받은 20명 적발 → 벌금형(200~300만원) 및 지급 보험금 반환

※ 의사, 상담실장 등도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 등 위반으로 처벌받음

## IV. 당부말씀

□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여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임

○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\*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 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

\*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 보상대상에 해당하도록 진료 기록을 변경하여 발급, 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 발급 등

### ※보험사기 신고방법

#### ▶ 금융감독원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

- ① 전화(1332→4번 금융범죄→4번 보험사기), 팩스(02-3145-8711)
- ② 우편(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)
- ③ 인터넷(금융감독원 홈페이지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) → 우측의 '보험사기신고')

#### ▶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